

도시민 끌어모을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한 12년 연장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 허용 수직농장도 사용기한 8→16년 완화 스마트농업·체험농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4도3촌(나홀은 도시, 사홀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도입을 결정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연장이 가능해졌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을 위한 임시 거처 활용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추진해 온 쉼터의 12년 사용 기한에 대한 연장 요구를 반영해, 시설물이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12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당초 쉼터의 사용 기한은 최장 12년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12년 제한에 대해, 일각에서

는 기간 제한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 쉼터는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또 데크, 정화조, 주

차장 등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어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나 소방차·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린 바 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주요 유통업체 매출 6.7% 증가... 오프라인은 0.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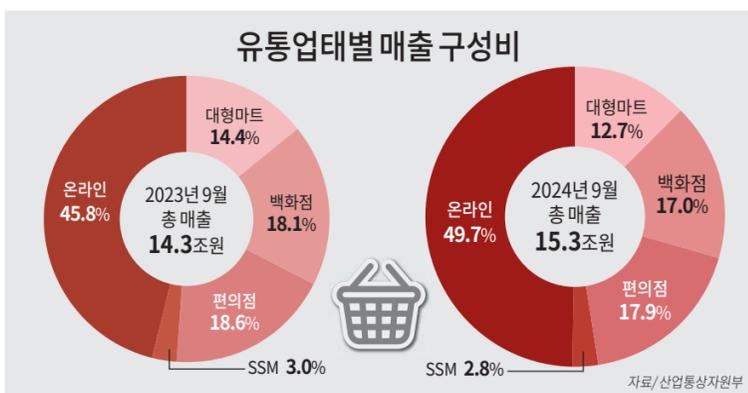
산업부,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매출 15.3조... 전년비 6.7% 증가 이른 추석 특수 '8월 매출'로 반영

올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른 추석과 늦더위 영향이란 분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1년 전(14.3조원) 대비 6.7%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15.7%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0.9% 감소했다.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올해 이른 추석(9월17일)으로 선물 등 명절 수요가



8월에 반영됐고, 늦더위로 가을옷 구매도 감소하며 하락했다. 업체별로 대형마트(-6.5%), 준대규모점포(-2.7%) 매출이 부진했으나, 편의점(+2.5%), 백화점(0.3%) 매출은 소폭 상승

했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 추석선물용 e쿠폰·여행상품·음식배달 분야 수요가 지속 증가했고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대, 늦더위로 인한 계절가전 구매 양향을

받아 증가했다. 서비스 매출(52.9%) 증가폭이 가장 컸고, 가전/전자(18.1%), 식품(14.7%)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해외지구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패션/의류 매출은 16% 줄었다.

온오프라인 상품군별 매출은 서비스/기타(24.8% ↑), 가전/문화(17% ↑), 해외유명브랜드(3.7% ↑), 식품(3.0% ↑) 순으로 증가폭이 컸고, 패션/잡화(4.6% ↓), 아동/스포츠(3.0% ↓) 품목 매출은 감소했다.

업체별 매출비중은 온라인(49.7%), 편의점(17.9%), 백화점(17.0%), 대형마트(12.7%), SSM(2.8%)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대구·경북 13개 시군에서 쌀 민간물량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뉴시스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2.3조 농민 128만명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도합2조 3000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농가)인 한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수는 128만여 명으로, 오는 11~12월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52만 명으로 총 6713억 원을 받는다. 올해는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작년(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 원/ha)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요건 검증순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국 상습 침수지 16곳에 8300억 투입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환경부가 상습 침수지역 16곳에 8300억 원을 투입해 침수 원인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1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2023년 사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총 1조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16곳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경기 안양 비산동, 경기 파주 야당동, 경기 화

성 사강리, 강원 강릉 교항리, 강원 강릉 교동, 강원 고성 대진리, 강원 고성 봉포리, 강원 속초 미내리1길, 강원 속초 금호동, 충북 충주 용포리, 충북 괴산 목도리2길, 충남 당진 채운동, 전북 군산 산월리, 전남 화순 만연리, 경북 영덕 장사리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약 830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km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용인 반도체 1호 공장 부지 조성 75% 달성

산업부, 첨단산업 특화단지 협의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호 공장(뺨) 부지 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도를 보이는 등 12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서울 한 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등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갖고 특화단지 투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특화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는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반도체 공장 1호기는 내년 초 착공,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가 75% 이상 진행됐고,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 공사는 내년 9월경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계부처,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전제조건인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에 대해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현안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력, 용수 등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2023~2024년 1400억 여원의 국비를 지원했고, 공공기관을 통해 10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함께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인력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난 8월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 신속히 추진단 구성을 마치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 기 착공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청주, 울산, 새만금,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차전지기업 위험률 취급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이 비수도권 특화단지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